

CONTENTS

- 1 열린단상
- 2~3 HOT ISSUE
 군산에너지과학도시 건설과 지역경제발전
- 4 연구원 리서치
 노안수발보장법의 도입배경과 주요 쟁점
- 5 JDI 리서치
 대형재난 위기관리시스템으로 극복하자
- 6 제4차 콜로퀴엄
 핀란드의 가족복지 정책
- 7 시사 리서치
 축제의 본질적 의미를 찾자
- 8 연구원 소식

전북발전연구원

열린뉴스

J E O N B U K D E V E L O P M E N T I N S T I T U T E

11월 2일은 군산의 미래 결정하는 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처분장(이하 방폐장) 유치가 11월 2일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군산을 비롯해 유치신청을 한 경북 포항과 경주, 영덕 등 4곳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해당자치단체마다 한수원본사이전과 양성자가속기센타 등 정부지원과 각종 인센티브에 눈독을 들여 사활을 걸고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군산도 방폐장 유치를 계기로 에너지과학도시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설계중이다.

에너지과학도시 프로젝트는 군산시 비응항을 중심으로 군장국가산업단지 및 인근 호수지역, 새만금방조제 주변지역, 고군산열도를 포함하는 약 700만평의 지역을 차세대에너지를 테마로 생태/환경, 연구/개발, 교육/전시, 관광/레저, 첨단의료/복지 등을 융합시킨 종합특화기술에너지도피아를 조성하는 미래비전사업이다.

부안사태를 경험한 전라북도는 이번이야말로 한치의 착오없이 방폐장을 기필코 유치시켜 군산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면서 전략산업인 에너지과학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으로 삼기위해 도력을 총결집하고 있다.

방폐장 사업은 국책사업이면서 갈등사업으로 분류, 특별법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투표를 통해 유치여부를 결정하는 첫 사례인 것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전문가들의 토론과 검토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왜곡된 정보나 본질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는 소중한 주민의 의사를 걸러낼 수 없게 한다. 결과에 관계없이 이번 투표가 군산지역의 주민이면 누구나 국책사업의 유치여부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환경에서 시행될 때,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승복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먼 훗날 국책사업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일이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속에서 군산의 미래비전을 결정하는 위대한 군산시민의 승리의 날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1월 2일 치러질 주민투표가 갈등과 분열을 씻고 대화와 타협으로 모두가 윈-윈하는 상생의 축제로 치러지기를 기대한다.

전북발전연구원장 한 영 주



전북발전연구원 열린뉴스
2005년 10월 통권 제5호

발행인 · 한영주
발행일 · 2005년 10월 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http://www.jd.re.kr
TEL. (063)286-9201
FAX. (063)286-9206

군산 에너지 과학도시 건설과 지역경제 발전

최근 군산지역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함께 입주 예정인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양성자가속기 센터 등 3대 국책사업의 유치를 계기로 군장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소위 “에너지 과학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에너지 과학도시” 프로젝트는 군산시 비응향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군장국가산업단지 및 인근 호수지역, 새만금방조제 주변 지역, 고군산열도 지역을 아우르는 약 700만평의 지역을, 비응향 관광개발, 고군산열도 관광단지개발 등 기존의 군산시 발전계획을 포함하면서 확대 발전시키는 것으로 2020년도까지 15년 계획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에너지 과학도시”의 기본개념은 에너지토피아(Enerptopia = Energy + Utopia)를 구현하고, 차세대 에너지를 중심으로 생태/환경, 연구/개발, 교육/전시, 관광/레저, 첨단의료/복지를 융합시킨 종합특화기술단지를 중심으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푸른 “에너지 과학도시”에는 에너지·환경관련 연구개발 기능 및 첨단방사선의료센터 기능을 갖춘 에너지과학지구(E-Science Zone), 에너지·환경관련 교육·전시·체험 등의 기능을 갖는 교육·전시·체험지구(Education Zone), 생태/환경보존 및 공원의 기능을 갖는 생태환경공원(Ecology/Environment Part), 관광레저 및 상업활동을 위한 관광·상업지구(Entertainment/Economy Zone)를 조화롭게 배치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된다.

낙후와 침체에 허덕이는 항구도시 군산

군산시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와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둔 광역시에 비해 정치·경제적인 역량이 부족하고, 전라북도에서도 전주, 익산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못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항구도시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날리던 군산시의 위상은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배후 산업기지 및 인구 중심지(소비지)의 부재와도 관련이 있다. 농업 및 어업도시로서의 위상은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와 낮은 농업 생산성으로 인해 미래의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도시 측면에서의 도시경쟁력은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산업기반이 갖추어진 울산, 창원, 광주, 인천 등의 타 도시와 경쟁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첨단기술도시로서의 전망도 IT, BT, NT 등 첨단기술에 대한 인프라인 우수한 연구단지 및 대학과 산업체의 부재로 인해서 타 도시와의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수혜지역에서도 소외

농업 및 어업을 위주로 한 전통도시로서의 군산의 위치는 농수산물 수입 개방 및 경쟁력 저하로 인해 매우 저하된 상태이고, 이러한 추세는 점점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마땅한 주력 기반기업의 부재 및 전통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고용이 줄어들고 있고, 도시 생산력 및 소득도 감소하고 있어 인구 유출 현상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침체의 일로를 걷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수혜도 광주전남과 전주·익산과 같은 타 시도에 밀려서 소외될 우려마저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전체적인 침체의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것이 군산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오부치 레이크타운〉

국제산업관광도시로의 발전 잠재력 풍부

지정학적인 위치 측면에서 군산시는 환황해권의 중심지역이고, 수도권과의 팽창 및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해 수도권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으며, 공주지역의 신행정도시 및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인구집중도시와의 접근성도 매우 좋아서 배후 도시와의 연계에 의한 발전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는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신흥 중국 등 동북아 지역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 국제산업관광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군산과 전북지역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환황해권에서의 지정학적 강점과 풍부한 SOC 등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시켜 군산과 전북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마땅한 계기는 없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전북경제 도약 절호의 기회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 가능성과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양성자가속기센터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군

산이전 등 3대 국책사업의 유치와 이에 따른 막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금 및 양성자가속기센터와 한수원본사 유치는 지역개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양성자가속기센터 및 한수원 본사의 유치로 인해서 첨단 기술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관련 기업·연구소·산업체들이 유치되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환경 산업을 지역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국가적인 지역균형개발 정책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는 산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펼쳐졌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환경산업을 전체의 관광 자원과 연계시킴으로써,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으며, 침체되어 있는 농업, 수산업과 같은 전통산업의 관광 상품화를 통해서 동반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략산업과 연계 시너지 효과 기대

에너지과학도시 건설은 전라북도 전략산업인 RFT(방사선융합기술) 사업과 연계하여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유사한 종류의 사업 수행 시에 기술단지 개발에 의한 집중화 효과는 이미 미국의 실리콘 밸리, 한국의 대덕밸리 등에서 입증된 바 있다.

Techno-Valley 개발의 이점은 교육, 연구인프라의 공동투자, 개발 및 사용에 의한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절감 효과, 산업에 대한 주민 이해의 증진을 들 수가 있다.



〈풍력발전단지〉

만약 개개의 방사선 관련 기술들이 연관성을 가지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된다면, 고비용·저효율 및 주민의 반발 등에 의해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라북도에서는 RFT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인근 정읍시에는 첨단 방사선이용연구센터를 유치하였고, 군산

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 및 전북 지역에서는 맹목적인 불신을 받는 방사선 산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미래 청정 첨단기술인 양성자가속기응용기술과 RFT기술이 집적화되어 추진된다면, RFT산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주민의 반대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RFT 산업의 입지 선정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결정적 계기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 동서 간, 도농 간의 격차는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다. 전라북도의 경우는 전국 최하위의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라북도의 산업구조가 기본적으로 1차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은 그 입지 조건이나 기반 조건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를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 전환시키는데 교두보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절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잘 발달된 교통조건, 1,000만평의 산업 용지, 풍부한 공업용수, 전통적인 산업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저가의 외국 농산물 수입개방과 더불어 농촌이 급속히 붕괴하고 있고, 그 결과로 군산인구 및 전북도인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경우, 전라북도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이는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및 양성자가속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핵심 국가과학기술의 광범위한 활용 및 관련 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국책사업의 경우, 지역간 균형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푸른 “에너지 과학도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서해안 중부권의 경제자유구역 개발도 활성화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변의 유휴 농촌인력을 흡인할 수 있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군산은 물론 전북 전체의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산업·경제연구팀 김진석

열린뉴스 구독신청

(063) 286-9201



열린뉴스는 연구원소식을 전하는 열린지면입니다.
연구원 홈페이지 PDF파일로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수발보장법의 도입 배경과 주요 쟁점

보건복지부는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간병 및 돌봄 서비스를 2008년 7월 1일부터 제도적으로 제공할 목적에서 지난 9월 15일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제안한 노인수발보장법(안)은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커다란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의 경우 아직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노인수발보장법을 조기 도입하려는 주요 이유는 최근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즉 한국사회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저출산 현상으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노인인구의 증가를 경험하였지만 노인의 건강수명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도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는 과거 가정이 담당했던 노인에게 대한 돌봄 역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전적으로 가정이 감당했던 치매, 중풍 노인의 돌봄을 사회가 감당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처음으로 7%를 넘어 한국사회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이행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보건복지부는 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허약, 장애 노인에게 대한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고, 2001년 정책수립을 위한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제시한 정책공약 실천 차원에서 2003년 3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골격을 마련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몇 차례의 공청회와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시안을 마련하였다.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간병, 목욕, 간호, 일상생활 지원 등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수발보장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그 적용대상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만,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가운데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발보장의 이용 절차는 본인이 신청하면, 수발등급판정위원회의 방문조사를 바탕으로 수발등급이 결정되고, 수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수발급여는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보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며, 노인수발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지원, 보험료, 본인부담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본인 부담은 수발시설 이용비용의 2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상위계층은 1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수발 자격관리, 보험료징수, 급여심사, 재정관리 등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관리는 「국민보험공단」이 담당할 예정이며, 수발등급의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급여의 질 관리 등 전문적 업무수행은 새로 신설되는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노인수발보장법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실시 및 수발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중증노인부터 실시하며, 2010년 7월부터 경증 노인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인수발보장법은 몇 가지 측면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을 갖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슈는 노인수발보장법안의 명칭과 그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즉 보건복지부는 2005년 7월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까지 전국 순회 공청회와 여론 조사를 통해서 '공적노인요양노인요양보장제도' 시안을 마련하였지만 갑자기 '노인수발보장법'으로 변경하여 최종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노인복지는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성이 필수적인데 현재의 노인수발보장법은 보건의료가 빠진 복지서비스(수발)에 치우쳐 자칫 기능저하가 심한 노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으로 끝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수발보장제도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는 충분히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너무 서두르고 있어 향후 국민연금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끝으로 노인수발보장제의 관리는 건강보험공단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윤창출이 낮을 경우 노인수발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가장 근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그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장점과 함께 잘 정비된 조직망을 갖고 있어 새로운 조직구성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노인문제와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국가사회의 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재정적, 심리적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준비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노인요양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원장 박재규

대형재난, 위기관리시스템으로 극복하자

지구촌이 대형자연재난공포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말 동남아를 강타한 초대형 쓰나미에 이어 최근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로 미국의 남부도시가 물에 잠겼다.

뉴올리언스시는 사망자가 최소 수백명에서 수천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사망자 최대 6,000명 추정) 이래 역사상 최악의 자연 재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형자연재난은 남의 나라 얘기만이 아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만도 3천3백억원대에 달해 2002년 태풍 루사때 피해액 2천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로 64년만의 대형재난으로 기록되었다. 피해복구는 전라북도의 열악한 재정적 여건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재난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대형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더 전문성과 효율성, 신속성을 갖춘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절박해지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웠던 안정 도시의 이미지가 무너지면서 전라북도도 재난에 대비하는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기관리시스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단계를 통해 재난이 발생하기 전·후에 보호유형설정과 위기관리 활동 체계, 유관기관의 임무·역할, 위기경보 수준과 그에 따른 대응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 안전 및 경제적 안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적·물적·기능적·사회적 체계 등을 총합적으로 관리, 보호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지진으로부터 인명, 재산, 인프라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1995년 1월 17일에 발생한 한신대지진(재산피해 10조엔, 사망자 6,433명, 부상자 43,792명)은 일본 전후 최대의 피해를 가져다 준 재난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위기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한신대지진 이후 위기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총리실 지하에 모든 정보가 집결하는 정보집약센터를 만들어 진도 6이상의 지진이 나면 자동으로 총리관저에 대책본부가 설립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물의 내진설비 강화를 추진하였고, 지진발생과 동시에 가스관·수도관·전기 등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재난발생시 자원봉사자 시스템 구축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없이도 자위대의 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우리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찾아오는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난부서의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단일접촉창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재난부서는 현재 소방본부상황실, 치수방재담당, 민방위 재난 담당, 국가기반보호담당

등으로 다분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의 개념으로부터 관리 운영되었던 것이 사회적 갈등 및 이슈로 인한 국가기반의 위기 인식 공유로 형성된 사회적 재난이 포괄적 범위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재난의 발생 원인이 자연재해,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될 경우 해당 부서가 책임부서가 되어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난의 발생이 동시에 두 가지 유형의 재난 성격을 가질 경우 책임 부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에 급이 갈 수 있다. 이로 인해 늦장 대응이나 예산 집행의 지연, 인력 동원의 미비 등 총체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현재의 다원화된 조직 부서를 총괄적인 형태의 재난 및 위기관리 부서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난 위기사 대응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민간단체, 군·경, 기업 등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신속한 자원동원이 가능하도록 절차 및 협조체계, 연락체계, 보상체계 등을 정비해야 한다. 농촌의 고령화, 장비소유주의 동원기피, 유관기관과의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신속한 동원이 어렵고 이로 인해 대응 및 복구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재난 대비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기술,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재난의 원인과 대응책임 등을 지자체에 두고 있다. 그러나 재난의 발생은 한 지역에서 파생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재난대비 예산의 투입 비율은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난 및 위기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한 적절한 기술지원과 예산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재난 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유비쿼터스 시대에 적합한 재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예산 및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내에 단독부서로 비상대비대응부를 설치하여 대비능력 시스템 구축 및 평가체계 구축, 대비관리능력 향상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실효성이 있는 위기관리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위기관리대응매뉴얼을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판단에 근거하여 실현 가능한 기준과 원칙을 통해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재난 정보 분석, 예측, 시나리오 설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문화·관광연구팀 이 동 기

핀란드의 가족복지 정책

- Kim Luotonen 주한 핀란드 대사



본원은 지난 9월 27일 Kim Luotonen 핀란드 대사를 초청하여 “핀란드에서 가족과 여성의 역할, 그리고 성 평등성”이라는 주제로 제4차 콜로кви엄을 개최하였다. 핀란드 국민의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실태, 여성의 사회활동과 이를 보장 지원하는 모성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여성의 정치활동 등이 소개되었다. 복지와 양성평등에서 선진화 된 핀란드의 사례는 향후 한국가족복지정책의 방향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본문은 강연의 주요내용 요약이다. (편집자 주)

핀란드는 북유럽 복지국가로서 후발주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가 유례없는 경제적 호황과 함께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거쳐 수준 높은 복지와 평등성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었던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양성평등을 유인하는 사회구조와 핀란드 국민의 정진력에 기초하고 있다. 척박한 자연환경에 대응하여 이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노동력이 필요했으며, 초기 농업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은 필수적이었다. 또한 초보적이고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열악한 건강상태는 남성 노동자의 낮은 소득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남성의 가족생계에서의 역할부재는 강력한 가부장제적 문화와 제도의 발전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핀란드의 자연환경과 역사는 생존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양성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하였다.

핀란드 여성의 학교교육에 대한 조기접근은 남녀간 능력 차이를 차단시켰으며 현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70%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할 수 있는 것은 사적영역에서 여성에게 주어지고 있는 돌봄영역에 대한 국가적 배려이다.

핀란드에서 사회적 돌봄의 확장은 196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는 곧 복지국가의 확장이며 사회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하는 어머니의 경우, 아동이 3살이 될 때까지 돌봄휴가(무급휴가이며 약간의 사회보조금이 지급 됨)와 더불어 가정돌봄 수당이 주어진다. 유급 신생아 보호휴가로 약 11개월이 주어지며 아버지의 경우는 3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노동법은 어머니에게 출산 휴가동안 일자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은 고등학교 혹은 직업학교를 마치는 시점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모성보호에 대한 선진적인 제도와 사회적 장치는 핀란드에 대해 인류평등주의적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나 여성의 광범위한 노동참여가 노동시장에서의 양성간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지라도 동일 직업에서 남성보다 20%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행정부문에서도 고위직으로의 승진이 용이하지 않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고위직 승진은 개방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간호사나 미용사 등 서비스직과 단순기술직종에 편중되어 있으며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핀란드 젊은이들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덕분에 초기에 독립하는 추세이다. 부모의 재정적 상황과 무관하게 가정을 떠난 20세 성인에

게 재정적 지원과 주택보조, 학업보조금 등이 주어진다. 가정을 떠난 젊은이들이 대부분 학생기숙사에 살거나 혹은 전세 아파트에 살게 되며 초기 단계에 동료와 함께 살게 된다.

파트너를 찾기 위해 젊은 날의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부부로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유럽국가 가운데에서도 이혼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추세로 이혼율이 지속된다면 결혼하는 부부의 약 절반이 이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혼이 보다 쉽고 용이한 것은 1988년에 제정된 결혼기본법에 잘 나타나 있다. 이혼하기 위해 더 이상 유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몇 차례의 강제조정에도 동의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이 공식적으로 성립된다.

이혼으로 인하여 많은 남성들이 혼자가 되는 반면, 양육권과 친권이 주어진 여성에게는 자신의 유급고용을 통해 지원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 통계적 분류를 위해 이러한 홀부모를 ‘가족없는’ 범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인구의 약 23%가 바로 ‘가족 없는’ 범주에 속하고 있다.

핀란드 여성은 여전히 가부장제적 특성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정치적 평등성을 획득하였다. 1907년 첫 번째 일일 의회 선거에서 200명 의원 가운데 19명이 여성의원으로서 선출되었으며 1991년에는 여성이 77명으로 전체 의원의 38.5%를 차지하게 되었다. 가장 최근 2003년 선거에서는 전체의원의 37%(74명)가 여성의원으로서 선출되었다. 2000년, 핀란드에서는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탄생되기도 하였다.

핀란드 여성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참여는 높은 집값과 이를 소유하기 위한 주택시장의 불안정성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타 유럽국가에 비하여 일찍이 주어진 여성의 대학입학 자격 및 참정권, 세계에서 처음으로 의원이 되는 자격을 부여한 정치적 평등성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완전한 양성평등을 위해 갈 길은 멀다. 여성의 동등한 대우를 확보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1987년 평등법이 공포되었으며 국가평등음부즈맨 기구는 평등법의 집행을 감독하고 있다.

정리 | 여성정책연구팀장 조 경 욱

주한 핀란드 대사 Kim Luotonen(킴 로오토넨)은

- 1973 헬싱키대학 경제학 전공
- 1975 외무부 근무 시작
- 1982-85 핀란드 브에노스 아이리스 2등 서기관
- 1985-89 외무부 무역정책사무소, 가트 근무
- 1989-95 외무부 참사관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
- 2000 주싱가포르 핀란드 대사
- 2004- 주한 핀란드 대사

축제의 본질적 의미를 찾자

문화관광부는 2005년 각 시·군별 축제 개최현황조사에서 전국의 축제를 약 1,000여 개로 파악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축제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각 시·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축제의 수를 헤아려 보면 약 100여 개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은 개최목적에 따라 주민화합, 관광, 산업, 예술 축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나 지역의 문화적 전통에 상관없이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민속행사, 국악한마당, 전통 체험 등으로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문화관광부는 2005년 현재 백화점식 행사 구성과 문화가 실종된 상업, 오락적 축제가 주류이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한 축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소모성 축제를 진단하고 우수 축제를 적극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최초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우수한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집중 육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여기서 우리는 축제의 수가 많고 적음을 지적하기 전에, 축제가 최초 자신이 발 딛고 사는 지역 공동체에 입각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의 전도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자 하였던 본질적 속성으로부터, 현대 축제가 어떻게 변형되고 재창조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 왜 축제가 만들어지고, 향유되며, 어떠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축제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 이해가 선행되어야 자칫 경제적 가치로만 축제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그릇된 잣대로부터 진정한 축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제의 본래적 의미는 첫째, 유희적 본성을 충족시켜 주는 놀이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중의 하나이자 둘째, 일상적인 생의 흐름에서 삶이 만족스러운 것이 되지 못할 때 일상의 전도를 통해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하는 것이며 셋째, 초월적 에너지의 획득을 통한 신성한 영감을 얻는 것이라는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반면, 현대의 축제는 제의성은 약해지고 세속적인 사회구조를 이탈하여 아직 새로운 구조적 유대가 형성되지 않은 중간적 상태로서의 커뮤니티스, 부자와 가난한 자·지배자와 피지배자·규칙과 무질서가 뒤바뀌는 일상성의 전도, 승리에 대한 기대감·일상에서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모방, 현기증 나는 상태를 즐기는 등의 유희적 본성이 강조되고 축제에서 연출된 사건이나 상황을 즐기려는 기능적인 면이 강화됨으로써, 일상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축제성의 경험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대의 축제는 축제의 속성 중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미지화 하는가에 의해 축제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동의

를 획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중적으로 좋은 호응을 받는 축제는 단순히 소재의 특별함이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에 기반하여 일상적 전도가 가능한 집단적 몰입이 축제 속에서 경험되도록 할 수 있을 때라야 지역주민의 전폭적 지지와 더불어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요사코이 마쓰리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구 약 32만명의 지방도시인 코오치시의 연중 최대의 축제로 자리잡은 요사코이 마쓰리는 8월중 4일간에 걸쳐 행해진다. 요사코이 마쓰리는 일본의 전통 악기인 나루코를 반드시 사용해야한다는 점과 음악에 일본의 전통민요인 요사코이부시를 삽입해야 한다는 규정 외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창조하여 참여할 수 있는 집단적 춤 축제이다. 요사코이 마쓰리는 지역의 전통적 문화에 현대적 감성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집단적으로 춤을 추면서 느끼는 엑스터시로서의 일상적 전도의 기능과 관람료뿐만 아니라 축제의 공간으로서 지역의 대형상점들이 활용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김제 지평선 축제 또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지평선 축제는 점점 잊혀져 가는 조상들의 농경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교육적 기능을 담보하고 있지만, 축제의 공간에 들어온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매료시킬 만한 속성을 가진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지평선축제가 초기에 가졌던 축제의 신선함이 약해지고 있다. 이제는 이전의 쌀축제라는 경쟁적 축제가 만들어지고, 비슷한 체험을 여타의 축제에서 진행함으로써 지평선 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축제가 생성기에서 성장기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축제의 본질적 속성 중 무엇을 중심으로 축제를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문화관광축제라는 말 속에는 관광객의 많은 참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겠다. 관광객의 많은 참여는 평소에 안 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 등을 축제의 시간과 공간에 허용함으로써 일상의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축제의 본성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축제를 위해 현대적 축제는 본래의 진정한 축제의 속성으로부터 그 출발을 삼아야 할 것이다.

| 문화·관광연구팀 김 동 영

연구원 청사 이전

전북발전연구원이 지난 9월 20일 옛 전라북도청 서편청사 2층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새로운 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본원은 지난 3월 통합이후 공간이 비좁아 여성정책연구소와 분리 운영해 오다 이번에 완전한 한몸이 되어 명실상부한 전라북도의 종합발전연구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우)560-761
 대표전화 : 063) 286-9201 Fax : 063) 286-9206
 홈페이지 : www.jd.re.kr

◆ 연구원 청사이전을 축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지역혁신협의회 총회 및 지역혁신박람회 개최

제2회 전국지역혁신협의회 총회 및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가 10월 5일부터 5일간 대구 EXCO에서 전국 산·학·연·관 지역혁신주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 의장 김영석(우석대 총장)의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이번 박람회는 누구나 참여해 지역혁신의 성과와 가능성을 느끼고, 나눌 수 있도록 성공사례발표, 전시, 국제컨퍼런스 및 학술행사, 문화공연, 지역특산물한마당, 지역혁신체험장 등 학습체험행사와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될 계획이다.

◎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행사일정

행 사	10.5(수)	10.6(목)	10.7(금)	10.8(토)
개 막 행 사	10:30~13:00			
성공 사례 발표 회	지자체	13:00~17:00		
	지역혁신체계구축	10:00~18:00		
	대 학		10:00~17:00	10:00~17:00
	중소기업		14:00~18:00	
	연구지원기관		10:00~17:00	
지역혁신협의회총회	15:00~18:20			
지역혁신연구회 총회 및 세미나	15:00~17:40	10:00~18:30		
혁신도시 심포지움		13:30~17:00		
혁신클러스터 세미나			9:40~17:40	
신활력사업 성공전략 세미나		10:00~12:00		
국제 컨퍼런스	16:00~17:30	17:00~18:30	15:30~17:30	13:00~18:00
학회연합 학술회의	13:00~18:00	13:00~18:00	13:00~18:00	10:00~18:00
부처 및 혁신기관 주관행사	14:00~18:00	10:00~18:00	10:00~18:00	
전시행사	10:00~18:00(EXCO 1층, 3층)			
문화·이벤트행사	10:00~21:00 야외무대			
지역특산물 한마당	10:00~21:00 야외행사장			

■ 「전북발전포럼」 원고모집 ■

- 원고성격 : 지역현안 등과 관련된 칼럼, 논문 등
- 제출기한 : 수시모집
- 제출방법 : 이메일(이메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디스켓과 함께 제출),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알림

■ 「연구과제」 공모 ■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본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송부해 드리며, 심사를 거쳐 공동연구참여 등의 기회를 드립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홈페이지 www.jd.re.kr(연구제안)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대형국책사업발굴 현상공모

본원은 새만금사업 이후 전북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대형국책사업발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아이디어를 현상공모 합니다.

1. 공모 세부 개요
 - 가. 공 모 명 : 전라북도 새 청사 시대 전북비전을 제시할 대형 국책사업
 - 나. 공모기관 : 전북발전연구원
 - 다. 관련 세부 내용
 - 전북의 지역적·문화적·자연적 환경 등을 고려한 특화된 대형 국책사업
 - 농·축·수산, 문화관광산업, 과학·산업기술, 교통·건설, 복지여성, 교육 등 제 분야의 국책 사업
 - 사업 발굴시 정부의 행정절차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국책사업
 - 전북발전을 획기적으로 모색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고부가가치 국책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중앙 공공기관 이전,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한 지역개발사업
 - 사업별로 재원조달 방안과 실효성 있는 국책사업 투자계획의 제시
 - 라. 사업 대상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 전 지역
 - 내용적 범위 : 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기간 3년 이상 장기 사업
2. 응모자격 : 전북 및 국가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사람, 기관 및 단체
3. 응모 기간, 제안서 교부 및 응모 방법
 - 가. 기간 : 2005. 9. 15(목)~10. 14(금) 18:00까지
 - 나. 교부·접수처 : 전북발전연구원 대형국책사업발굴연구팀
 - 전화 : (063) 286-9222, Fax : (063) 286-9206
 - 다. 응모 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응모제안서] 2부·관련 디스켓 2개를 기간 내에 접수처에 제출(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1 전북발전연구원 대형국책사업발굴연구팀)
 - 인터넷 접수 : 기본 [응모제안서] 양식에 의거 okpeace@jd.re.kr로 제출
4. 심사(평가)위원의 구성 및 심사(평가) 일정
 - 가. 심사(평가)위원의 구성 10월 14일까지 응모를 종결하고, 10월 15~18일까지 전국 단위 차원에서 응모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심사(평가)위원의 구성
 - 나. 심사(평가) 기준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지침에 관한 설문 조사 실시. 특히, 응모한 자료들에 준거하여 ① 사업의 필요성, ②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의 타당성(적합성), ③ 추진과정에 필요한 재원조달 가능성, ④ 사업 효과의 효율성 등 심사(평가) 지침에 대한 기준 설정
 - 다. 심사(평가) 일정
 - 1차 심사(평가): 2005. 10. 19~10. 25.
 - 2차 심사(평가): 2005. 11. 1~11. 10.
5. 시상일자, 시상금 및 당선작 특전
 - 가. 시상일자: 2005. 12월 중
 - 나. 시상금 및 상패
 - <전문가 응모 제안>
 - 최우수 발굴 사업 (1점) : 시상금 500만원 및 상패
 - 우수 발굴 사업 (2점) : 시상금 200만원 및 상패
 - 가능 발굴 사업 (5점) : 각 시상금 50만원 및 상패
 - <일반인 아이디어 응모 제안>
 - 최우수 아이디어 사업 (1점) : 시상금 50만원 및 상장
 - 우수 아이디어 사업 (2점) : 시상금 30만원 및 상장
 - 가능 아이디어 사업 (5점) : 각 시상금 20만원 및 상장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원 대형국책사업발굴연구팀 (☎063-286-92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